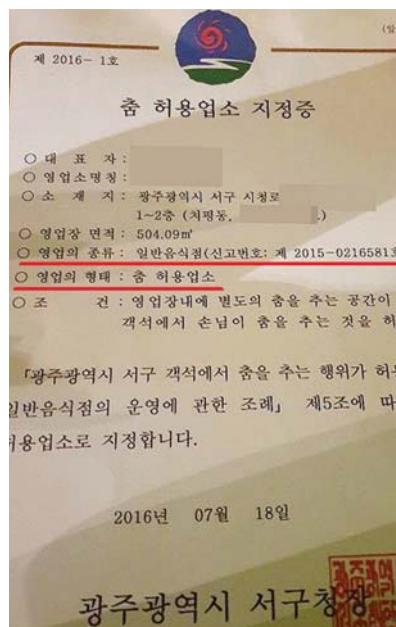


1946년 4월 창간 제 2753호

E-mail : i honam@naver.com

2019년 7월 30일 (음력 6월 28일) 화요일

'광주 클럽 불과' 그 뒤엔 국내 유일 '특혜 조례' 있었다



27명의 사상자가 난 광주 서구 클럽 복종 구조물 붕괴 사고와 관련, 행정당국이 해당 클럽의 변칙 영업을 합법화 시켜주기 위한 특혜 조례를 제정했다는 의혹이 일고 있다. 춤을 출 수 없는 '일반음식점'인 이 클럽은 관할구청의 '춤 허용' 조례 제정 일주일 만에 '춤 허용업소' 변경을 신청, 변칙 영업이 합법화됐다. 사건은 광주 서구가 해당 클럽에 발급한 춤 허용업소 지정증.

전국 '춤 허용 일반음식점' 7곳 조례 중 특례 부칙 '유일'

'변칙 영업' 합법화...허점 틈타 불법증축·안전관리 소홀

적용 영업장 두 곳 불과...조례 입법 전후 과정도 '의혹'

지난 27일 30명 가까운 사상자가 발생한 광주 도심 클럽 복종 구조물 붕괴 사고의 근본 배경에는 국내 유일의 특혜 조례가 있었다.

사고가 난 클럽은 변칙 영업으로 두 차례 행정처분을 받았으나, 조례는 이례적인 부칙까지 덧붙여 합법적인 길을 틸렸다.

29일 광주 서구의회 등에 따르면 지난 2016년 7월 11일 '액서에서 춤을 주는 행위가 허용되는 일반음식점의 운영에 관한 조례(춤 허용 조례)'가 제정, 시행됐다. 일반음식점 영업장 내 음식 섭취를 위한 탁자·의자 등을 설치한 곳(액서)에서 춤을 출 수 있도록 허용하는 것이 주된 골자다.

붕괴 사고가 발생한 A클럽은 지난 2015년 7월 18일 서구 치평동에 일반음식점 영업을 하겠다며 신고, 이듬해 1월부터 영업을 시작했다.

식품위생법 상 일반음식점은 술과

음식만 손님이에게 제공할 수 있고 춤추는 행위가 원칙적으로 허용되지 않는다. 영업장 내에서 춤을 주려면 소방안전·식품위생 규제가 보다 강하고 세금 부담이 큰 '유흥주점'으로 영업신고를 내야 한다.

그러나 A클럽은 춤을 출 수 없는 일반음식점에서 '유흥주점'처럼 운영하는 변칙영업을 하다 식품위생법 위반으로 2차례 행정처분을 받았다. 개업 3개월 만인 2016년 3월 한 달간 영업이 정지됐고, 3개월 뒤에는 6360만원의 과징금 처분을 받았다.

과징금 처분이 있는지 한 달 뒤인 7월 11일 서구의회는 공교롭게도 '춤 허용' 조례를 제정, 시행했다. 이에 따라 A클럽은 '춤 허용 지정업소' 변경 신청을 내 일반음식점에서 클럽영업을 법적 문제없이 계속할 수 있었다.

이같은 법에 허점이 생긴 것은 서울

마포 등지를 중심으로 7080, 8090 복

고을아 열풍에 맞춰 이른바 '감성주점'이 성행하기 시작한 2015년 전후다.

식품위생안전처는 일반음식점 내 춤추는 행위를 금지하면서도 감성주점의 변칙영업을 양성하고 제도화해 안전·위생을 보다 철저히 관리하기 위해 식품위생법 시행규칙 개정안을 마련. 이듬해 2월부터 시행했다. 개정안에는 안전 기준이 충족될 경우 액서에서 춤추는 행위는 자치단체의 조례로 허용할 수 있다는 내용이 포함됐다.

이에 따라 서울 마포구가 2016년 2월 19일 춤 허용 조례를 처음 시행했다. 이어 서울 광진구, 서울 서대문구, 부산 부산진구, 광주 서구, 광주 북구, 울산 중구 순으로 춤 허용 조례를 제정, 시행했다.

전국 226개 기초자치단체(지난해 지방선거 기준) 중 춤 허용 조례를 제정, 시행 중인 기초자치단체는 7곳에

불과하다.

이 중 A클럽이 위치한 광주 서구의 조례 부칙 조항에는 특례를 가장한 '특혜'가 담겨졌다.

해당 조례 2조에서는 춤 허용업소를 영업장 면적이 150㎡ 이하인 일반음식점 중 손님이 액서에서 춤출 수 있는 곳'이라고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부칙 2조(150㎡ 초과 춤 허용업소 지정에 관한 특례)에는 '조례 시행 이전 일반음식점은 면적 제한을 받지 않는다'고 예외를 뒀다.

다른 자치단체 6곳의 춤 허용 조례에는 춤 허용업소의 구체적인 면적 제한을 두 조항도, 기준 영업장에 특례를 주는 부칙도 없다. 인접한 광주 북구도 부칙에는 시행일자만 적혀 있다.

실내 면적이 50409㎡에 달하는 A클럽은 국내에서 유일한 '특혜' 조례가 제정된 지 일주일 만인 같은해 7월 18일 춤 허용 일반음식점으로 변경, 지정됐다. 해당 조례에 근거해 서구지역에서 춤 허용 일반음식점으로 영업하고 있는 곳은 A클럽과 기준에 신고된 감성주점(394㎡) 단 2곳 뿐이다.

A클럽은 그러나 서구의회 조례 논의 과정에서 사실상 '구제 케이스'로 언급되기도 했다. 행정처분을 앞둔 특정 영업장의 변칙운영을 계기로 재발

방지를 위한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기보다 행정처분이 부당한 만큼 이를 피할 수 있는 합법적 장치를 마련하기 위한 논의도 이뤄진 것으로 알려졌다. 사실상 'A클럽만을 위한 특혜 조례'라고 일컬 수 있는 대목이다.

조례 속 안전규정도 제도화를 통한 철저한 안전관리를 꾀한 시행규칙 개정 취지와는 달리 유명무실화됐다. 서울 서대문구를 제외한 6개 자치단체 모두 조례에는 '연 2회 이상지도·감독할 수 있다'는 규정만 있을 뿐 의무조항이 없다.

서구 역시 A클럽이 춤 허용 업소로 지정된 지 3년 동안 제대로 된 지도·감독을 하지 않았다.

특혜와 제도적 맹점 속에서 A클럽은 3차례 불법 증·개축을 일삼고 안전규정을 제대로 지키지 않았다. 이는 결국 지난 27일 A클럽 내 불법 증축된 복층 구조물 붕괴로 2명이 숨지고 25명이 다치는 참사로 이어졌다.

서구 관계자는 "춤 허용 조례가 상위법인 식품위생법과 시행규칙 개정 취지를 무력화한 셈이다. 특례도 사실상 기존 업자 편의를 고려한 것으로 보여 선뜻 이해되지 않는다"고 밝혔다.

신봉우 기자

전남어촌지역 시장·군수협 10월 출범…16개 시·군 참여

기후변화 문제 공동대응·어촌현장 목소리 정책반영

전남지역 16개 시장·군수가 참여하는 '전남어촌지역 시장·군수협의회'가 오는 10월 출범한다.

29일 전남도에 따르면 최근 완도군청에서 '전남어촌지역 시장·군수협의회' 구성을 위한 실무회의가 열려 공동협력사업과 규약 등을 논의했다.

완도군을 중심으로 바리를 끼고 있는 16개 시·군이 기후변화에 따라 발생하는 각종 문제에 공동대응하고 어촌현장의 목소리를 정책에 반영하기 위해 협의회 구성 to 추진하고 나선 것.

실무진은 이날 ▲어촌지역에 필요한 사업의 공동연구▲어촌지역 관련 법령 및 제도개선활동▲경제 활성화를 위한 사업발굴 ▲전국 순회 각종 심포지엄 개최 등 공동협력 사업안을 마련했다.

이들 지자체는 앞으로 바다환경 오염이나 기후변화로 인한 국민건강 피해에 대한 문제점과 미세먼지 관련 정책발굴 등에 대한 공동연구를 추진한다.

또 어촌지역 경제활성화를 위한 사업 발굴과 지역특성에 맞는 수산사업이나 정책을 발굴해 공유하는

네트워크를 구축할 예정이다.

다양한 어촌지역 관련 사업육성의 필요성과 이용방법, 참여방법 등에 대한 공동의 홍보도 추진한다.

이와 함께 지자체와 학계, 정치인, NGO 등과의 교류를 통해 어촌지역 정책 전환에 대한 공감대를 확산시킬 계획이다.

이들 지자체는 앞으로 8월내 협의회 구성을 위해 지방의회 의결 및 고시 절차를 거친 뒤 10월 중 창립총회를 가질 예정이다.

전남도 관계자는 "협의회가 구성되면 수산도인 전남어촌지역이 한 단계 업그레이드되는 계기가 될 것이다"고 말했다.

김정환 기자



전남도의회 이용재의장과 의원들은 29일 도의회 앞에서 최근 일본 정부의 일방적이고 보복적인 경제 도발 행위를 강력히 규탄했다.

전남도의회 "일본 경제도발 행위 즉각 철회"

전남도의회가 29일 최근 일본 정부의 일방적이고 보복적인 경제 도발 행위를 강력히 규탄했다.

전남도의회 이용재 의장과 도의원들은 이날 도의회 앞에서 긴급 기자회견을 갖고 "일본 정부는 양국의 이익에 반하는 수출 규제 조치 등 경제

발 행위를 즉각 철회하라"고 촉구했다.

또 강제징용 피해 배상에 관한 대한민국 사법부의 판결을 존중하고 피해자들에게 정당한 배상과 진심어린 사과를 촉구하고 "이번 사태가 해결될 때 일본방문을 중단하고 전 도민과 함께 강력한 일본 제품 불매운동을 전개

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용재 의장은 "우리 정부는 강제징용 문제해결과 양국 관계 정상화를 위해 외교적 노력을 다하고 있으나 일본정부는 외교적 결례를 범하며 사태를 더욱 악화시키고 있다"면서 "일본 정부의 물상식한 도발 행위는 한일 양국, 나아가 세계의 경제에도 도움이 되지 않는 반 외교적 망국 행위"라고 엄중 경고했다.

김정환 기자

한국언론진흥재단

퇴근시간 엄수, 행복시간 준수!

일은 근무 시간에! 여가는 퇴근 이후에!
생활 속의 워라밸 실천으로 기업과 근로자 모두 행복해집니다.

국민 이에녹님께서 제안한 슬로건입니다.